

금남로에서

정재현



얼마 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이 중국·인도와 일본의 중간에서 '동유병(sleepwalk)'에 걸려 허덕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의 수출 챔피언인 한국이 가격과 품질면에서 중국과 일본 틈에 끼여 고전하면서 길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FT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자동차의 울산과 베이징(北京) 공장을 꼽았다. 노동자의 월급은 베이징이 360달러(약 34만원)인데 비해 울산은 그 10배가 넘는 4천580달러(약 430만원)다. 반면 생산량은 베이징이 시간당 68대로, 울산의 55배보다 훨씬 많다. 이 같은 취약한 노동성은 한국의 입지를 더욱 좁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위기론 공방

FT의 보도는 이견ող 삼성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이 최근 한국경제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갇힌 '샌드위치' 상황이라고 잇따라 언급한 것과 맥

락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은 "중국 이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가는 상황에서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라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체가 4~6년 뒤 아주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주·전남 미래 뭘 먹고 사나

한국경제 위기론에 대해 "너무 과장됐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너무 호들갑을 떨어서 불안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제는 심리적 측면이 강한 만큼 지나친 우려는 경제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경제의 최일선에서 뛰는 최고 경영자들이 보는 시각을 단순 불안감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위기론은 경기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면 성장동력이 다 떨어져 당장 몇 년 뒤에 먹고 살 것이 없어질 것이라는 절박함에서 나왔기 때문

이다. 실제로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반도체나 전자, 자동차, 조선 등 주력업종의 경쟁력은 날로 떨어지고 있다. 내수도 수년째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새 먹줄거리를 찾아내지 못하면 한국경제 위기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광주·전남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광주의 경우 기아차 광주공장도 삼성 광주전자 제조업 생산액의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지역의 주요 먹줄거리였다. 하지만, 삼성 광주전자의 주력제품인 가전산업은

기에도 농업은 세계적인 추세로 굳어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절대 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더욱이 전남의 제조업은 곁을 마 수준이다. 극히 일부 지역만이 조선과 제철, 화학업종으로 겨우 먹고 살고 있다. 지금으론 200만 도민의 뚜렷한 먹줄거리가 없는 실정이다.

선박과 집중 필요

현재 추진중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나 2012 여수세계박람회, J프로젝트 등은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주역은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들 사업의 과급효과는 제한적이다. 광주·전남지역은 4~6년 뒤에 과연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지자체, 지역기업, 지역민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무한경쟁 시대에는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글로벌시장에서 낙오되기 십상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또 컨버전스라는 기술 트렌드는 조금만 뒤떨어져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광주·전남도 선박과 집중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이다. 시기를 놓치면 동유럽 한자처럼 감감한 발길을 헤매 수 있다.

〈논설위원〉 jhjung@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김병인



경남 합천 '새천년생명의숲'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호를 딴 '일해공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합천에서는 '일해공원' 지지군민대회가 열리고 '철폐단'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에 반대하는 반대단체들은 합천을 '탈레이 항의 방문'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이러한 반인륜적이고 역사를 왜곡, 미화하는 반역사적인 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두환이 누구인가? '5·18광주 민주화운동'때, 광주시민 학살의 최정점에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안다. 비록 정치인들이 광주 학살의 원흉을 전락적으로 애매하게 발표

다.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망언과 역사를 왜곡하고 미화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해 공원과 관련해서는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의장의 발언이 비교적 단호하다. 정 전의장은 정부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해당 자치단체가 국민 앞에 사과하도록 하고, 바르게 지도 감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여 공원을 만든 자치 단체에 대해 조사한 뒤 국민 앞에 보고 할 것"을 제시하였지만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 성지 공주의 국회의원들은 목소리마저 들리지 않는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제 정부는 정부가 나서서 역사를 부인하고 왜

일해공원 어떻게 볼 것인가?

했지만, 1980년 5월 광주를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학살의 원흉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미화하고 기념하는 공원을 만든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국제사회에는 어떻게 이해를 구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일이 이렇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책임이 크다.

역사를 부정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여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망언들이 수없이 있었지만 정부는 그럴 때 마다, 방관하다 이러한 지경이 되었다. "백범 김구는 빈 라덴, 일본 경찰을 이유 없이 죽인 살인범", "일본 대사관에서 집회를 하는 할머니 가운데 80%는 가짜",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는 축복"이라는 지탄, 한승조 등의 민족 정기를 훼손하고 역사를 부인하는 망언이 나올 때 마다, 정부는 방관했다. 이례서는 안된

것을 방지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다시 방관한다면 미래 세대 역사의 눈은 흐려질 것이다.

프랑스는 '계소법'을 제정해 전범 부인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등도 계소법과 유사한 '홀로코스트 부인법'을 제정해 역사를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지역 감정의 벽을 넘어 민족 화합과 번영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명제이다. 학살과 인권 말살의 역사를 비판하고 제지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 앞에 놓인 중요한 임무이다.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격(格)을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한다.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서강정보대 교수·2006년 4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캠퍼스 곳곳 오토바이·폐자전거 방치

대학 캠퍼스에 오토바이와 폐자전거가 방치되고 있다. 대부분 3~4학년 학생들이 재학중 타던 것을 졸업하면서 치우지 않고 버려두고 학교를 떠났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타고 다니다가 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아무 거리낌 없이 버려두고 학교를 떠나 버려서야 되겠는가. 그 때문인지 학교 시설관리에서 불인공용 주차 위반 경고장이 붙은 오토바이들

이 캠퍼스 곳곳에 즐비하다. 캠퍼스에 세워놓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대학당국이 경고장치를 거쳐 보낸 것들이지만 캠퍼스 곳곳에 버려져 있던 오토바이들 가운데는 겉모양이 멀쩡한 것들도 적지 않다. 필요할 때 쓸 줄만 알고 뒷처리를 할 줄 몰라서야 배물만큼 배운 대학생들의 행동이 아니다.

▲김원준·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기고

김용하



청소년들의 자살이나 폭력 사건들이 불철에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은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26.1명 (총 2047명)으로 OECD회원국 가운데서 1위라고 한다. 이는 자살대국이라고 불리는 일본보다 (20.3명) 더 높고, 교통사고 사망자의 1.5배나 되는 수치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살충동을 느끼거나 실제로 자살행동에 옮기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의 48.6%가 자살충동을 경험했고, 13.7%는 구체적으로 자살방법까지 생각해보았다고 한다.

청소년 극단적 행동 예방하려면...

그 뿐이 아니라 최근 청소년들의 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학교폭력이 갈수록 흉폭화 해지고 빈도도 급증하고 있다. 범죄의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 촉법 나이를 12세에서 10세로 낮추려는 계획까지 발표되고 있다. 잔인한 폭력과 자살등 극단적인 행동에는 정신적 장애, 성격부진에 따른 비판, 가정의 불화, 이성문제, 집단따돌림, 외모지상주의, 인터넷상의 폭력이나 성적 민감성등 사회병리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 깔린 가장 공통된 문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그 첫째가 생명경시의 풍조를 바로 잡는 일이다. 현대 생사학의 창시자인 정신과 의사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성숙시키기 위해 태어났으며, 죽음은 성장의 마지막 단계"라고 했다. 이는 사는 것과 함께 죽는 것 자체도 아름답고 가치있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신체와 목숨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야말로 모든 폭력과 무질서의 근원이라 할 것이다. 둘째, 자존(自尊)의식을 길러 주어야 한다. 자신의 존재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비록 타인과 비교하여, 능력이 없거나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존재함으로써 우주가 인식되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라는 철학적 바탕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소중한만

큼 내 주위의 남도 단 하나뿐인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이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인간 사랑과 이를 실천하는 인권존중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가치를 내면화하고, 이를 생활속에서 행동으로 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수반하여 남에게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주거나 괴롭히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비열한 짓임을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통해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자기존중에서 시작하여, 타인존중으로 확산되고, 너와 내가 화합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체제를 갖도록 하는 정신개혁운동이 온 가정, 학교, 사회등 범국가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광주 품앗이학교 교장·수필가〉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산불예방 만전 기해야

지난 20일까지 전국 산불 발생건수가 232건으로 지난해 145건에 비해 60%나 증가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 논두렁·밭두렁 소각으로 인해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거나, 또 산촌각들의 담뱃불 부주의가 대형 산불도 우려되는 시기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불 발생 건수중 연평균 20%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인접 지역 논·밭두렁 소각시 소방관서에 신고한 후 공동으로 태우기를 실시하고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을 선정하는 등 기우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입산자의 실화방지를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 산행 제한을 하고 입산시에 도성냥, 담뱃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서 무심코 던진 담뱃불이 대형산불이 되기도 하는데 운전자의 주의를 요구된다. 산불 관련 처벌규정으로는 무허가로 산림에 근접한 100m안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이간 자는 5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 산림 안에 담배꽂음을 버린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 산림 안에서 취사행위를 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이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재앙을 초래하는 산불예방과 진화활동이 더 이상 관계공무원의 몫일 수는 없다.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류호일·광양소방서 방화과장

시설

문화수도 특별법 발효 사업 탄력 기대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발효됐다. 특별법의 발효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의 법적·상징적 위상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원조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특별법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 및 절차, 추진 주체, 재원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하는 등 안정적이고 유연한 재정운영이 가능해 사업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화수도 조성사업은 이번 특별법 발효로 한층 탄력을 받게 됐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문화전당의 랜드마크 문제와 기능의 적정성 여부, 전문 공연장 설치, 문화산업 육성, 광주시의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바로 그것이다.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문화전당 랜드마크 문제는 사업주체인 문광부와 지역 여론 간에 시각차가 크다. 지역에서

는 건물 자체만으로 국제적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랜드마크 기능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문광부는 설계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극히 일부 건물만 지상으로 노출시킬 수 있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438천여원의 총 투자액 가운데 최소 6천여원에서 최대 1조2천여원에 이르는 광주시 부담액도 문제다.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다. 이밖에 전문 공연장의 규모와 문화산업 육성 방안 등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논란과 갈등의 1차적 책임은 문광부에 있다. 사업초기 과정에서부터 지역여론을 무시한 채 독선적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문광부는 지금이라도 지역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특별법의 발효로 문화수도 사업의 기틀을 다진 만큼 오는 5월 마련되는 종합계획안은 광주지역 시민사회의 동의를 바탕으로 여론 간에 시각차가 크다. 지역에서

개인 빚 사상 최대... 경제 앞날이 걱정이다

국민 1인당 빚이 1천400만원에 육박,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개인 부채는 총 671조1천억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11.6% 늘어났다. 1인당 부채규모는 1천387만원으로 6월 말의 1천294만원보다 100만원 가까이 증가했다. 개인부채 증가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부채는 늘어날 수 있다. 한국은행도 개인부채 증가가 경제성장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자산의 건전성과 부채 상환능력이 뒷받침되면 문제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간단하지 않다. 개인부채 증가율은 2003년 4.9%, 2004년 4.3%였으나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한 2005년 10.9%로 높아진 뒤 지난해 11.6%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새로운 국민계정 체계를 적용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다.

가계 빚이 늘어남에 소비 위축과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고 다시 소득감소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자칫 가계발 금융위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서두르기 바란다.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도 적신호다. 개인부문 금융자산 잔액은 금융부채 잔액의 2.25배 수준에 달했다. 2002년 2.15배, 2003년 2.22배, 2004년 2.27배, 2005년 2.31배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였지만 지난해에는 뒷걸음질을 쳤다. 그만큼 부채 상환능력이 약화됐다는 의미다.

가계부채가 개선될 조짐도 없다. 부채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경제의 불확실성은 증폭되고 있다. 일자리와 소득은 줄어들고 있으나 세금과 교육비 등 지출은 늘어나고 있다. 부채 상환능력이 없는 가계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등 파장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가계 빚이 늘어남에 소비 위축과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고 다시 소득감소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자칫 가계발 금융위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서두르기 바란다.

無等鼓

최근 서울역 '목도리네'의 선행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한 여대생이 할아버지에게 목도리를 감겨주는 모습이 인터넷에 올려졌고, 이를 알아본 친구에 의해 여대생의 신원이 밝혀지면서 목도리네 부부의 미담도 드러났고 한 은행의 특별채용 제안으로까지 이어졌다.

홍익대 경영학과 4년 김지은(24·여)씨는 얼마 전 저녁, 길을 걸다 앉은 채로 버지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막 걸리를 사려간다는 할아버지의 심부름을 해주고 값을 치르려는 할아버지의 돈을 뿌린 채 대화를 나눴다. 사고로 다리가 아픈데 치료도 받을 수 없고 지하도에서 노숙한다

‘목도리네’



이 뿐만이 아니다. 김씨의 아버지 민태(56·울산)씨도 홀로 사는 마을 노인(80)을 22년째 돌보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부녀연전(父傳女傳)'인 셈이다. 아버지 김씨는 지난 1986년부터 마을 할머니를 매달 2~3차례 찾아가 용돈도 건네고 건강도 챙겨준다. 딸 지은씨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할머니 식사 수발을 도왔다. 아버지는 "고집 센 지은이가 할머니 수발을 다녀오면 한동안 운운해지고 눈길도 따뜻해지곤 했다"고 전한다. 이에 감동을 받은 하나금융그룹은 "김씨의 선행이 고대사망이라는 회사 이미지와 일치한다"며 다양한 지원과 함께 채용 의사를 전달해놓은 상황이다. "테레사 효과"라고나 할까, 선행은 자신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밝고 흐트럽게 한다. 제2·제3의 김씨가 계속 나타나 각 대학생이 된 후 2주에 한 번씩 한 보육시설을 찾아 아이들을 돌보는 선행을 계속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회장 許宰浩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 |
| 1952년 4월 20일 創刊 | |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
| 대표전화 2200-500 | | www.kwangju.co.kr | |
| 편집국내선 | 사회 2부 2200-619 | 총무부 2200-511 | 문화사업국 2200-541 |
| (대표) FAX 222-4918 | (F A X 227-0118) | (F A X 222-8005) | (F A X 222-0195) |
| 편집부 2200-629 | 문화생활부 2200-626 | 광안국 2200-521 | 판매부 2200-551 |
| 정치부 2200-616 | 여론대우부 2200-628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
| 경제부 2200-617 | 체육팀 2200-627 | 디자인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사회1부 2200-618 | 사건부 2200-690 | 사업2부 2200-552 | (F A X 02-773-9335) |
| (F A X 222-4267) | 조사부 2200-570 | ※구로동 월정 8,000원 1부 400원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